

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 전국으로 확산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지정 국회 세미나

청주시·성남시 등과 공동후원 추진전략 등 논의, 오늘 덕진구 지혜의 원탁서 시민 공감대 형성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광역시가 없어 소외됐던 전북의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가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청주시·성남시 관계자, 김광수·김병관·오재세·정동영 국회의원,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비롯한 학계, 언론인 등 관련 전문가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특례시 도입 필요성과 특례시 지정기준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전주시를 비롯한 3개 도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존의 단순 인구기준에서 종합적인 행정수요와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첫 발제자로 나선 하동현 안양대 교수는 특례시와 유사한 사례인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제도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한 후, 이를 현재 거론되고 있는 특례시에 적용함으로써 인

구 100만의 요건이 타당한지 △특례시의 자격요건은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하 교수는 전주시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전체 인구에서 35%를 차지하는 도내 제1의 도시 △실제 주간에 전주시에서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 약 100만명인 도시 △전북 지역의 행정수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종 기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 등으로 정의했다.

이어,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도 "특례시 지정을 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적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고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례시 인구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안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비롯한 학계, 기자 및 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회도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광역시가 없는 도의 중추도시인 전주시와 청주시, 행정수요가 높은 성남시의 특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가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앞줄 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을 모았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 이어 26일 오후 3시에는 전북대 삼성문화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앞줄 오른쪽)이 직접 시민들을 찾아 '덕진구 지혜의 원탁'을 개최하고 공감대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수백년간 인구도, 노동의 기회도, 생산도, 투자도 몰리면서 기

를 독식해왔다. 현행 특례시 지정안은 배부른 수도권만 배를 불리고 소멸의 위기로 치닫는 지방을 죽이는 일"이라며 "특례시 지정은 전주시민은 물론, 전북도민과 후손들을 위해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인 만큼 도전정신과 열정, 용기를 모아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김병관(더불어민주

당, 성남시분당구갑)·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을)·김태연(더불어민주당, 성남시수정구)·변재일(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오세세(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정동영(민주평화당, 전주시병)·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전주시을)과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주시와 청주시, 성남시가 후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자생단체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 전주시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시민들을 찾아 나섰다.

시는 25일 중화산동 봉우회 회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9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구위기 문제와 심각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는 등 저출생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 송병용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문강사는 '하나보다 둘, 둘보다 셋'이라는 주제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위기를 맞게 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예상되는 미래의 문제점을 소개했다.

시는 올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101 60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은행에서 아동명의 통장을 개설해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1,000명에게 이달부터 1인당 2만원의 금융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생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행정을 펼치는 자생단체 회원들의 인식개선 사업은 인구정책을 확립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양성평등 문화의 확립, 육아·교육에 대한 이해 역할의 중요성, 가족의 소중함, 배려 등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기차 구입하는 시민에게 보조금 지원

전주시, 올해 27억9800만원 투입... 전기차 160대 등 총 240대 대상 최대 1500만원

전주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총 27억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는 시민과 기업, 단체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선, 시는 26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약 160대를 대상으로 1대당 최대 1500만원까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1억9800만원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약 80대분의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보급대상자층은 환경부가 고시한 승용·초소형·이륜차 등 32종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 신청기간내 접수자 중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단, 보조금 지원대상 후보자로 결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출고 후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차량 출고 날짜와 후속 절차를 사전에 잘 파악한 후 신청해야 한다.

지원 받고자 하는 시민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제작사별 판매대리점에 오는 3월 4일부터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판매대리점에서 웹사이트(www.ev.or.kr/ps)에 신청하는 방식이며 방문·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주시 에너지전환과(063-281-2324, 2314, 5188)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확대

전주시, 내달 2일부터 시행 수거보상규모 1억8000만원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 등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규모는 지난해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1억8000만원으로, 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시 지정계시대 이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전신주·가로등주·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 등에 불법 부

착된 벽보 △삼가지역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광고물과 전단지 등이다.

단, 공공주택 단지나 건물 옥내 배포된 광고물, 배포되지 않은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등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은 일반형은 1장당 1,000원, 폭자형 1장당 500원 △A4용지보다 큰 벽보는 100장당 3,000원 △A4크기 이하의 벽보·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장당 1,000원이다.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매주 5만원, 월20만원으로 제한된다.

수거보상제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2019 행복한 나들이' 덕진구-전주대 협약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양연수)는 22일 소외계층 문화증진 사업인 '2019 행복한 나들이' 운영을 위해 전주대학교, 동현교회(담임목사 이진호)와 상호 협약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민의 손길이 절실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봉사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덕진구는 2015년부터 시작된 '행복한 나들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1,300여명의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지게 했으며, 이를 1회성 행사에서 그치지 않도록 화차별 참여자와 자원봉사자의 결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참여대상자를 확대, 어르신부터 아동·장애인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동안 전주대학교와 동현교회는 명절마다 소외된 이웃을 챙기고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과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협약식에서 "노인가구와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여가·문화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한바탕 살림 100인 체험단' 운영

전주시가 사회에 진출한 청년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맞춤형 금융요청 프로그램 제공한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올해 청년 자활 참여자 등 사회 초년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금융자산 형성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요청 프로그램인 '전주 한바탕 살림 100인

체험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주 덕진자활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청년자활 참여자들이 먼저 오는 3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2시간씩 교육을 받고, 이후 1년 동안 지속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송효철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25일 LH전북본부와 임대주택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범죄예방 환경 개선

전북경찰청-LH전북본부, 업무협약 체결

전북경찰청이 범죄예방과 도민의 치안을 위해 LH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5일 LH전북본부와 임대주택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LH전북본부가 관리 중인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셉테드(CPTED) 기법을 활용해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다가구주택 매입 저소득층 임대사업 관련 시공 시 범죄예방진단팀의 진단, 분석 및 의견반영 등 참여절차를 만든다는 취지다.

이를 토대로 LH전북지역본부는 보안등, 가스배관 가시캡 등 범범시 설 확충과 폐쇄회로(CC)TV 촬영 각도 조정, 단지 내 조도개선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취약지역 순찰활동을 강화

하고 각종 고지서에 범죄예방 문구를 기재하는 등 범죄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인철 경찰청장은 "경찰은 도민의 다양한 치안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존의 현장출동, 범인검거 등 사후 대응 활동이 취약요인 관리 등 사전 예방으로 변화함에 따라 셉테드(CPTED)를 적용한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라며 "LH전북본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가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LH전북본부장은 "LH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범죄예방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양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으로 도민들이 치안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석훈 기자

전북경찰, '고속도로 위험 사고 사전 차단' 특별 점검

해빙기를 맞아 고속도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25일 고속도로 순찰대 제3지구대가 3월 4일까지 일주일 간 토사유출과 태널 입·출구 부분의 구조물 상 낙석 위험, 도로면의 포트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특별 점검 대상은 익산정주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등 4개 노선 주요 절개지가 해당된다.

매년 2월 말부터 3월 초순경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도

로 절개지의 토사유출과 낙석위험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또한, 도로면에도 제설을 위해 살포한 염화칼슘 등의 영향으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되는 시기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3개 순찰팀의 노선 순찰 근무자들이 해당지역을 중박해 실시하고, 점검 후 위험발생 우려 지역에는 시설담당자가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강석훈 기자

남친과 다투다 출동경찰관 폭행한 40대 여성 징역유예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징역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9시 40분경 전주시 중화산동 한 음식점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당시 자신의 남친친구와 다투던 중 경찰관이 개입하자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모로 치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2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했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음주운전 사고 낸 교통경찰 '정적 2개월' 처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교통경찰이 정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사고를 낸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A순경에 대해 정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순경은 지난 1월 16일 자정쯤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적 수준인 0.064%였다. 조사 결과 A순경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순경은 검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는데 오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징계위원회는 A순경에 대해 사고에서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훈 기자